

외부자-내부자 노동시장 위험지위와 복지태도*

강 지 영, 신 어 진†

충남대학교, 일리노이주립대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사용하여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위험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사회보장, 직종을 바탕으로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 불안정 노동자, 불안정 자영자, 사회보장 안정-외부자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집단 별로 복지태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불안정 노동자는 소득수준과 사회적 보호 수준이 낮고 지속된 일자리에 종사하는 집단으로서 고소득 내부자에 비해 실업자에 대한 보장과 연금지출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였다. 반면, 불안정 자영자는 내부자와 고소득 내부자에 비해 빈곤 지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지위와 복지태도간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복지태도의 형성은 소득계층보다는 노동시장의 위험지위에 기인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복지태도, 내부자, 외부자, 불안정 노동자

* 이 논문은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어진, Illinois State University 조교수, 100 N University St, Normal, IL, USA 61761, E-mail : oshin@ilstu.edu

강지영,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제1저자)

■ 최초투고일 : 2022년 8월 30일 ■ 심사마감일 : 2022년 9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10월 14일

1. 서 론

복지국가란 시장(market)에 대한 대응이자 구성원이 경험할 수 있는 질병, 노령, 실직 등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재할당하는 체계이다. 복지국가가 재분배 기제로서 작동하는 데에는 정치적 과정이 필연적이다. 행위자들은 자원과 권력을 바탕으로 갈등과 연합의 전선을 형성하고 이러한 복지정치과정을 통해 복지국가는 발전된다(안상훈, 2020). 따라서 복지발전에 영향을 주는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소득 계층이나 계급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서구의 경험과는 다르게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을 기반으로 복지태도를 형성하지 않으며,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증세는 반대하는 모순이 발견된다(김영순, 여유진, 2011; 손병돈, 2018). 이러한 복지태도의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은 계급이나 소득계층이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서 기인한다(홍경준, 김사현, 2018). 탈산업화와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해 더 이상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을 단일한 범주로 간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급과 소득계층은 고용관계에 따른 노동자들의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서재욱, 김운태, 2014). 이 점에서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지위가 복지태도 형성에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김수완, 안상훈, 2013; 서재욱, 김운태, 2014). 노동지위는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동지위는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사회정책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업 위험이 높고 사회보장의 수준이 낮다.

노동시장에서 불균형적으로 분배된 위험과 자원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복지국가에서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노동시장 내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받는 내부자와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외부자 간의 격차(고혜진, 2019; 권혁용, 2019; 백승호, 2014)가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 지점이다. 고용이 안정된 내부자와 불안정한 외부자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태도가 상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외부자들은 복지제도의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내부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복지를 활용하고 계층화와 이중화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Rueda, 2005).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뿐 아니라, 복지국가의 재분배에서도 외부자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제적, 제도적 불평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이철승, 2017).

본 연구에서는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외부자와 내부자의 노동시장 위험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외부자와 내부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는 노동지위(Rueda, 2005; 권혁용, 2019; 정승국, 2021)에 초점을 두고 종사상 지위에 근거하여 복지태도를 살펴보았다(김운태, 서재욱, 2018; 서재욱, 김운태, 2014; 정운태, 2018). 본 연구에서는 외부자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 기존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소득, 사회보장, 종사상 지위, 직종(고혜진, 2019; 백승호, 2014)의 지표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으로 노동자집단을 구분한다.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노동시장 위험지위의 양상을 살펴보고 각각의 노동자 집단과 복지태도간의 관련성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다. 또한, 사회정책이 다양화되고 개인의 이익이 분화됨에 따라 제도별로 복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Fossati, 2018) 다양한 영역의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다. 이 연

구를 통해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1) 복지태도

복지태도는 “복지의식에 기반을 둔 행동성향”(김영순, 여유진, 2011)으로서 역사적으로 확고히 형성되는 가치관에 비해 유동적이며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변화된다(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적 역동성에 따라 복지에 대한 태도가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을 고려한다. 또한, 복지국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서 복지태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행동성향에 초점을 두어 인식보다는 복지태도로 접근한다.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자기 이해에 기반한 설명,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치적 성향 등 가치지향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기 이해의 측면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지지하는 합리적 존재이며 자신이 속한 계급과 계층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계급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 노동계급의 투쟁과 정치적 동원이 복지국가를 형성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복지태도에서 직종에 따른 계급의 영향력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비계급성”을 지닌다(김영순, 여유진, 2011). 오히려 한국에서는 계급보다 소득수준의 계층변수가 더 설명력 있게 나타난다. 허수연, 김한성(2016)은 저소득층이 고소득 계층에 비해 불평등 개선과 분배, 복지증세를 지지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김윤태, 유승호, 이훈희(2013)는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증세에 대해 긍

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복지지위나 복지수급경험이 복지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수완, 안상훈, 2013; 김윤태, 서재욱, 2017; 남재욱, 신혜리, 2017). 김수완, 안상훈(2013)은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연금수급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금지출확대를 지지하는 것을 밝혀냈다.

복지태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연구는 성별이나 연령에 대하여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증세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2013)와 반대로 남성이 증세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연구도 있다(허수연, 김한성, 2016).

복지태도는 자기 이해의 관점으로 복지태도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가치에 따라 복지태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적 성향도 복지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복지태도간의 미약한 관련성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역사와 복지정책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한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 일 수 있다(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 김영순, 여유진(2011)은 한국에서 복지태도의 비계급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정치적, 역사적 관점으로 설명한다. 반공주의와 권위주의 정부의 역사, 그리고 지역주의 정치에 기반한 정당 정치 등이 개인이 복지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현재까지 연구에서는 진보적 성향이 증세에 찬성(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2013; 허수연, 김한성, 2016)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성향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수층에 비해 중도, 진보층에서 복지태도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낮은데, 진보층

에서 정부책임에 대한 지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

한국 사회에서 복지태도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서구와 달리 역동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복지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다. 복지태도는 인구사회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고용지위, 거주지역, 소득계층, 공적소득이전과 정치이념 성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복지 이슈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복지태도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정치사회적 상황과 이슈”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

2) 내부자-외부자 정치와 복지태도

노동시장 이중화론(dualization)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안정적인 고용형태와 관대한 사회보장을 경험하는 1차 혹은 내부시장과 불안정한 고용을 경험하는 2차 혹은 외부 노동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외부 시장에서 내부시장간의 상호간 이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제약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은 취약한 외부 노동시장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중된다(권혁용, 2019;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Rueda, 2005).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차별적 대우는 이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사회 내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화는 사회보장의 이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김연명, 2010; 이승윤, 백승호, 김윤영, 2019; Palier & Thelen, 2010).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정규직 중심의 표준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외부자 혹은 비정규성이 클수록 노후소득보

장에 있어 적용대상이 되지 않거나(김연명, 2010) 급여수급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이승윤, 백승호, 김윤영, 2019).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혜진, 2019; 백승호, 2014; 서정희, 박경하, 2015). 미국, 독일 등의 국가들 보다 이중화된 노동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신광영, 조돈문, 이성균, 2005), 연구에 따라 외부자의 규모를 43~50%로 추정하기도 한다(백승호, 2014).

개인의 노동지위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risk)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이 직면하는 노동시장의 위험은 복지정책의 지지와 관련성을 갖는다(Iversen & Soskice, 2001; Marx, 2014; Moene & Wallerstein, 2001). 불평등 등의 거시경제적 상황은 개인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형관, 이상록, 2019). 예를 들어, 실업률이 높아져 노동시장이 악화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실업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정부 개입이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경기 침체기에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도 친복지적으로 선회하기도 한다(Margalit, 2013).

내부자와 외부자는 유형과 정도의 측면에서 상이한 노동시장 위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태도가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이는 실증적으로도 입증되어 많은 연구에서 외부자들이 복지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김윤태, 서재욱, 2014; 김윤태, 서재욱, 2018; Häusermann, Picot, & Geering, 2012; Margalit, 2013; Moene & Wallerstein, 2001). 비정규직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보다 복지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김윤태, 서재욱, 2014) 실업의 위험이 높은 집단에서 실업 급여를 더욱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Rehm, Hacker, & Schlesinger, 2012). 홍경준과 김사현(2018)은 노동시장 이중화와 복지태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니지만, 소득지위와 분리된 위험지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고위험 집단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더 높은 지지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내부자와 외부자가 선호하는 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복지태도의 비일관성은 사회정책이 분화됨에 따라 외부자-사회복지찬성의 일원적 구도가 아니라 정책에 따라 집단별로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Fossati, 2018). 외부자는 안정적인 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험을 선호하는 내부자보다 공공부조와 아동수당 등의 급여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Häusermann & Schwander, 2012).

지금까지 국내연구들은 외부자와 내부자를 고용지위나 직종(권혁용, 2019)으로 구분하여 단순화하였으나 외부자성은 복합적으로 결정되고 단계적, 연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수완, 안상훈, 2013). 내부자-외부자의 이중 구조가 아니라, 외부자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어 취약형, 안정형, 저숙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혜진, 2019). 이에 따라 외부자와 내부자간의 단순한 구분으로 복지태도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위험지위에 따른 복지태도의 상이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홍경준, 김사현(2018)의 연구는 노동대중의 균열을 위험지위를 상/중/하로 구분하였으나, 위험지위는 수준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자와 외부자들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시장 위험지위에 기반한 노동자 내부의 균열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기존 연구에 따라 내부자와 외부자가 선호하는 제도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며, 내부자간, 외부자간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한다. 이에 따라 가설은 아래와 같다.

- 가설 1. 고용지위 불안정성이 강한 외부자일수록 실업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 가설 2. 소득과 관련된 위험이 큰 외부자는 빈곤에 대한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 가설 3. 내부자는 안정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를 다차원적이며 체계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고용관계,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형태 등 노동지위와 관련된 각각의 변수에 따른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김운태, 서재욱, 2014; 김운태, 서재욱, 2018).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관계를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집단을 접근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화와 불안정 노동자의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근로소득, 사회보장, 종사상지위, 직종 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계층 분석을 통해 노동집단을 도출한다.

노동시장 분절성과 복지태도를 임금노동자들만 국한하여 분석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 실망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김수완, 안상훈, 2013; 서재욱, 김운태, 2014).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외부자, 특히 불안정 노동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자영업자,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복지확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구에 비해 작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한국 사회 복지태도의 형성과 복지국가 발전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실업자, 비경활자, 자영업자들은 외부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비율이 전체인구

의 약 25-30%에 수준(서정희, 박경하, 2015)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2018)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매년 수집하는 가구 및 가구원 개인에 대한 문항, 소득, 사회보장에 관한 설문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인식조사’를 부가조사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련한 정보와 함께 개인의 복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의 ‘복지인식조사’에 응답하고 종사상 지위, 직종, 사회보장, 소득수준등의 정보가 존재하며 근로연령층인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88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변수

(1) 복지태도

복지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1) 빈곤에 대한 태도, 2)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부 책임, 3) 실업자 보장에 대한 태도 4) 항목별 복지지출에 대한 지지를 활용한다. 소득격차해소의 정부 책임성과 항목별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는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복지태도의 지표이다(김영순, 여유진, 2011; 서재욱, 김윤태, 2014; 이상록, 이순아, 김형관, 2017; 허수연, 김한성, 2016).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업자 보장에 대한 태도를 추가하였다. 실업자 보

장에 대한 항목은 국내 선행연구에서 잘 포함하지 않지만 해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Fossati, 2018; Margalit, 2013) 실업이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였다.

빈곤에 대한 태도는 빈곤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기인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책임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질문은 빈곤의 원인이 ①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②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의 부족, ③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④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이다. 각 문항별로 ① 매우 중요함, ② 약간 중요함, ③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④ 전혀 중요하지 않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데 실제 분석에서는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4가지 영역에 대한 응답의 총합을 4로 나눈 평균을 사용하였다.

정부 책임에 대한 문항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 책임이다’를 활용하였다. 실업자 보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은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이다. 정부책임에 대한 문항과 실업보장에 대한 문항은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 반대한다, ⑤ 매우 반대한다로 응답할 수 있으며 분석에서는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또한, 복지지출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증세 및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복지지출을 지지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찬성보다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복지는 확대되기 원하나 증세는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손병돈, 2016) 복지지출 증가를 지지하는 것은 명목상 복지 확대 지지와는 다른 차원일 수 있다. “각 영역별로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빈곤층 생활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등

의 4개 범주에서 정부지출이 늘어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각 범주는 ① 훨씬 더 많이 지출, ② 좀 더 지출, ③ 현재 수준으로 지출, ④ 조금 덜 지출, ⑤ 훨씬 덜 지출로 응답하게 되어있어, 분석에서는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빈곤의 원인,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부 책임, 실업자 보장에 대한 태도 및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응답의 측정값은 합산하여 사용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하였다.

(2) 노동시장 위험지위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동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노동시장 분절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소득, 사회보장, 종사상 지위, 직종을 활용하고 있다(고혜진, 2019; 백승호, 2014).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종사상 지위, 공적연금 가입형태, 직종, 소득수준을 이용하였다. 첫째, 종사상 지위는 ① 상용직, ② 임시일용직, ③ 고용주, ④ 자영업, ⑤ 실업, ⑥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였다. 많은 연구에서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왔으나, 노동시장의 위험을 임금노동자들만 국한하여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실업과 무급가족종사자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하거나 취약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고용주나 자영업의 경우 근로자와 다른 종류의 노동시장 위험을 경험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직종은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의 방식을 준용하여 관리자, 전문직을 ① 고숙련, 기술자와 준전문직을 ② 중숙련, 노무, 단순 노동 등을 ③ 저숙련으로 구분하였다(<https://www.lisdatacenter.org/data-access/variables>). 셋째, 소득은 ① 중위소득의 30% 이하, ② 중위소득의

30-70%, ③ 중위소득의 70-100%, ④ 중위소득의 100-150%, ⑤ 중위소득의 150%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중위소득의 경우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중위 임금을 적용하고 자영업, 고용주, 실업,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비임금근로자의 중위 소득을 활용하였다. 비임금노동자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지표인 임금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지위의 이중화가 사회보장의 이중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노동지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사회보장에서의 보호도 중요한 항목이다(고혜진, 2019; 권혁용, 2019; 백승호, 2014). 본 연구는 사회보장지표는 공적연금의 가입 형태에 따라 측정하였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사회적 보호를 측정하는 데 적합할 수 있으나,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당연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가 어렵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대상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가입대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사업주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모두 적용되는 공적연금을 기준으로 사회적 보호의 보장성을 측정한다. 공적연금의 가입, 연금수급, 연금미가입 혹은 비해당으로 구분하였다. 가입하였으나 응답 시점에서 납부예외나 미납인 경우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낮아지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미가입 혹은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수급하는 경우는 연금 가입으로 분류하였다. 연금수급자들을 따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연금수급의 원인이 본인의 가입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60세 이하의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본인의 가입에 의한 보장이지만 유족연금은 본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양자의 납부에 의한 보장이기 때문에 가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에서 복지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정치적 성향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거주지역, 혼인여부, 정치이념을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 중등, 고등 및 2년제 대학, 대학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가구소득수준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균등화한 것을 로그변환하였다. 가구소득수준이 통제변수로 포함된 것은, 개인의 노동시장지위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지위가 개인의 노동소득을 반영되지만, 가구소득과는 다르다. 기존 연구에서도 소득지위를 통제한 이후에도 위험지위의 영향력은 발견되었다(홍경준, 김사현, 2018). 소득수준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균등화한 것을 로그변환하였다. 거주지역은 복지패널 설문문항에 따라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으로 구분하였다. 혼인여부는 혼인상태인 경우와 이혼, 사별, 미혼인 경우로 측정하였다. 정치이념 변수는 복지인식조사의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형성하였다. ① 매우 진보적, ② 다소 진보적, ③ 중도, ④ 다소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으로 표현되었으며, ① 또는 ②로 응답했으면 진보적, ③은 중도, ④ 다소 보수적 또는 ⑤ 매우 보수적으로 응답했으면 보수적으로 구분하였고, 중도 범주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은 다음 <표 1>

에 정리되었다.

3) 분석방법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노동시장에서 내부자와 외부자를 가장 설명력 있는 계층의 수를 가진 최종모형을 선택한 후, 잠재계층유형, 즉 노동시장 위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복지태도를 예측하였다. 노동시장 외부자와 내부자를 유형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mplus version 8을 이용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개별 잠재변수를 식별하여 잠재적인 하위그룹을 분류하는 기법으로, 변수 중심적 접근 방법이 아닌 대상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이다. 잠재계층분석에 의해 분류된 하나의 계층에 속한 개인은 다른 계층의 개인과 다른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다(Muthén & Muthén, 2000). 잠재계층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종사상지위, 소득수준, 숙련도, 사회보장가입이며 잠재계층모형 통계를 위해 더미 변수화하여 0,1로 재코딩되었다.

잠재계층분석은 K계층의 적합도와 K-1계층의 적합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최적의 잠재계층수는 정보 지수(Information Criterion)를 비교함으로써 탐색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adj. BIC(the sample 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Entropy, LM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등을 사용할 수 있다(Muthén & Muthén, 2013). AIC, BIC, 그리고 adjusted BIC은 지수가 낮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Entropy는 계층의 정확도를 계산하는 지수이며 1에 가까울 수록 정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1>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중속 변수	빈곤의 원인-사회적 구조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들이 우리사회의 빈곤 원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 합산하여 평균함) ①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②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③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④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1=전혀 중요하지 않음, 2=별로 중요하지 않음, 3=약간 중요함, 4=매우 중요함	
	정부책임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책임이다. 1=매우 반대, 반대, 2=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3=매우동의, 동의	
	실업자 보장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1=매우 반대, 반대, 2=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3=매우동의, 동의	
	정부지출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기초연금) 빈곤층 생활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1=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2=현재 수준으로 지출 3=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
독립 변수	종사상지위	상용직	1=상용직, 0=기타
		임시일용직	1=임시일용직, 0=기타
		고용주	1=고용주, 0=기타
		자영업	1=자영업, 0=기타
		무급가족종사자	1=무급가족종사자, 0=기타
		실업	1=실업, 0=기타
소득수준	중위소득 30% 이하	1=중위임금(소득)의 30% 이하, 0=기타	
	중위소득 30-70%	1=중위임금(소득)의 30-70%, 0=기타	
	중위소득 70-100%	1=중위임금(소득)의 70-100%, 0=기타	
	중위소득 100-150%	1=중위임금(소득)의 100-150%, 0=기타	
	중위소득 150%	1=중위임금(소득)의 150% 이상, 0=기타	
숙련도	고숙련	1=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기타	
	중숙련	1=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0=기타	
	저숙련	1=농림어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0=기타	
사회보장	공적연금 가입	1=공적연금 가입, 0=기타	
	미가입	1=공적연금 미가입, 납부예외, 비해당 0=기타	
	수급	1=공적연금 수급 0=기타	
통제 변수	정치성향	1=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2=중도, 3=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	
	성별	1=남성, 2=여성	
	연령	연속변수	
	가구소득	균등화된 가구소득 로그변환	
	거주지	1=서울, 2=광역시, 3=시, 4=군, 5=도농복합군	
교육수준	1=초등, 2=중등, 3=고등 및 전문대학, 4=대학이상		

다. LMR은 k모형과 k-1모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p 값이 유의할 경우 k계층이 k-1계층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Muthén & Muthén, 2012; Collins & Lanza, 2009).

각 계층의 모형 적합 지수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AIC와 BIC, Adj. BIC는 계층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Entropy 값은 전체적으로 0.9이상으로 나타났다. Entropy는 잠재계층의 실질적 유용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지수로서 .8이상

이면 비교적 정확한 분류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김용희, 한창근, 2019; Muthén, 2004).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5개의 잠재계층으로 확정하였다. 정보지수 감소 폭을 고려할 때 4계층 혹은 5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모형적합지수와 Entropy 값, 잠재계층분포, 해석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5계층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5개 잠재계층으로 유형화하였다. 잠재계층의 조건부 응답확률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 적합 지수

N = 888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7계층
AIC	75298.529	71526.657	69108.191	67265.534	65713.237	64105.134
BIC	75529.813	71876.888	69577.368	67853.658	66420.307	64931.150
Adj. BIC	75418.594	71708.471	69351.752	67570.843	66080.294	64533.939
Entropy	0.987	0.993	0.986	0.992	0.993	0.987
LMR Test (p-value)	10566.54(0)	3783.454(0)	2438.727(0)	1866.61(0)	1578.112(0)	1633.561(0)
Proportion (%)						
Class 1	58	26	24	25	18	8
Class 2	42	42	32	19	17	14
Class 3		32	25	18	19	13
Class 4			19	24	15	16
Class 5				14	14	14
Class 6					18	24

<표 3> 5개 잠재계층의 조건부 응답확률

		고소득 내부자	불안정 자영자	불안정 노동자	내부자	사회보장안정 외부자
사회보장	연금가입	1	0.226	0	1	1
	연금수급	0	0.181	0.146	0	0
	비해당, 미가입, 미납	0	0.593	0.854	0	0
소득수준 (중위소득(임금) 기준)	<30%	0	0.439	0.229	0.026	0.103
	30-70%	0	0.13	0.364	0.099	0.36
	70-100%	0	0.102	0.23	0.359	0.298
	100-150%	0	0.145	0.13	0.517	0.165
	>150%	1	0.184	0.048	0	0.074

		고소득 내부자	불안정 자영자	불안정 노동자	내부자	사회보장안정 외부자
종사상지위	상용	0.746	0.112	0	1	0
	임시일용	0	0	1	0	1
	고용주나 자영업	0.105	0.064	0	0	0
	자영	0.148	0.475	0	0	0
	무급가족종사자	0	0.223	0	0	0
숙련도	실업	0.001	0.126	0	0	0
	고숙련	0.3	0.087	0.135	0.275	0.17
	중숙련	0.321	0.153	0.2	0.365	0.262
	저숙련	0.366	0.634	0.665	0.357	0.568

4. 결과분석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잠재계층분석에 따른 5개의 계층이 분류되었고 각 계층의 특징을 정리한 것은 <표 4>와 같다. 우선, 고소득 내부자의 경우 상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73.93%이지만 고용주나 자영업자도 포함되었고 이 집단에 속한 자는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소득수준도 중위임금의 150% 이상으로 구성되어 소득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다. 교육수준이 높아 대학교 이상의 학력수준이 48.57%이며 다른 집단보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나 46.07%가 진보라고 응답하였다. 내부자는 모두 상용직 종사자이며 고소득 내부자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고 일반 사무등 중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고소득 내부자를 제외하고 다른 계층에 비해 진보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36.36%가 진보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외부자로 분류될 수 있는 집단은 불안정 자영자, 불안정 노동자, 사회보장 안정-외부자이다. 다만 사회보장 안정-외부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는 외부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보장에서 소외

되지 않은 집단으로 내부자와 외부자간의 경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불안정 노동자보다 소득수준과 사회적 보호의 수준이 높지만 내부자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는 중간지대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보장 안정-외부자는 임시일용직이지만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소득수준도 불안정노동자에 비해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불안정 자영자는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에 비해 연금가입률이 낮아 35.94%가 가입했고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68.18%를 차지했다. 임시일용직, 실업, 무급가족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불안정 노동자는 임시일용직 저숙련직종에 종사하며 연금에 적용되지 않거나 비해당되는 경우가 96.03%로 어느 집단보다 사회보장에서의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

주목할 것은 기존 연구보다 다양한 집단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내부자, 외부자의 구분뿐 아니라 내부자 간, 외부자 간의 균열이 발견되었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 집단 뿐 아니라 불안정 자영자 집단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회보장-외부자를 포함하여 노동시장 외부자를 추정하면 약 45%가 외부자로 추정되어 그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4> 노동시장 위험 계층별 비교

		고소득 내부자	불안정 자영자	불안정 노동자	내부자	사회보 장안정 외부자	
사회보장	연금가입	100	35.94	-	100	100	Pearson chi2(8) = 724.9013***
	연금수급	-	1.56	3.97	-	-	
	비해당, 미가입, 미납	-	62.50	96.03	-	-	
소득수준 (중위소득(임금) 기준)	<30%	-	32.81	26.19	2.87	9.66	Pearson chi2(16) = 946.5376***
	30-70%	-	10.94	37.30	11.48	32.41	
	70-100%	-	9.38	19.05	36.84	28.28	
	100-150%	-	21.09	14.29	48.80	19.31	
	>150%	100	25.78	3.17	-	10.34	
종사상지위	상용	73.93	8.59	-	100	-	Pearson chi2(20) = 0.0014***
	임시일용	-	-	100	-	100	
	고용주나 자영업	10.00	11.72	-	-	-	
	자영	16.07	46.09	-	-	-	
	무급	-	19.53	-	-	-	
	실업	-	14.06	-	-	-	
숙련도	고속련	30.32	10.00	12.70	24.88	17.24	Pearson chi2(8) = 70.0778***
	중속련	31.05	21.82	19.05	38.28	24.14	
	저속련	38.63	68.18	68.25	36.84	58.62	
연령		46.50	48.0	42.2	43.15	46.56	F(4, 884) = 9.61***
교육수준	초등	.36	7.03	3.17	3.35	2.07	Pearson chi2(12) = 60.1437***
	중등	3.21	10.16	9.52	5.26	7.59	
	고등 & 2년제 대학	47.86	63.28	59.52	59.33	62.76	
	4년제 이상	48.57	19.53	27.78	32.06	27.59	
소득 (로그변환)		6.45	6.34	6.26	6.37	6.38	F(4, 884) = 2.10
거주지역	서울	17.14	9.38	20.63	16.75	22.07	Pearson chi2(16) = 43.7415***
	광역시	27.14	25.78	33.33	33.97	30.34	
	시	47.50	43.75	36.51	42.11	42.76	
	군	5.36	18.75	7.14	4.78	4.14	
	도농복합군	2.86	2.34	2.38	2.39	0.69	
정치적 성향	중도	30.71	53.91	52.38	46.41	48.28	Pearson chi2(8) = 38.5225*
	진보	46.07	23.44	30.16	36.36	27.59	
	보수	23.21	22.66	17.46	17.22	24.14	
N(%)		280 (31.53)	128 (14.41)	126 (14.19)	209 (23.54)	145 (16.33)	

+p<.10, *p<.05, **p<.01, ***p<.001

2) 노동시장분절성에 따른 복지태도 분석

다음은 노동시장위위에 따라 복지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표 5>는 정치적 성향 및 기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도출해 낸 계층이 빈곤과 정부책임, 복지항목별 지출증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기준집단을 불안정노

<표 5> 빈곤,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 책임, 실업자 보장 및 복지지출에 대한 태도

	빈곤태도 (사회책임)	정부책임	실업자에 대한 태도	지출 태도			
	b(S.E)	b(S.E)	b(S.E)	건강지출 b(S.E)	연금지출 b(S.E)	빈곤지출 b(S.E)	실업지출 b(S.E)
불안정노동자							
고소득 내부자	-.055 (.068)	-.175* (.082)	-.175+ (.091)	-.157* (.078)	-.135+ (.080)	-.100 (.084)	-.148* (.083)
불안정 자영자	-.042 (.07)	-.072 (.088)	-.141 (.098)	.040 (.084)	-.041 (.086)	.052 (.090)	-.172+ (.089)
내부자	.00 (.064)	-.126 (.077)	-.115 (.086)	-.173* (.074)	-.076 (.075)	-.129 (.079)	-.167* (.078)
사회보장-외부자	.041 (.069)	-.027 (.083)	-.100 (.093)	.033 (.081)	.069 (.081)	-.030 (.086)	-.076 (.085)
불안정 자영자							
고소득 내부자	-.012 (.067)	-.103 (.079)	-.034 (.088)	-.197* (.076)	-.095 (.077)	-.152+ (.081)	-.077 (.080)
내부자	.043 (.065)	-.103 (.079)	.026 (.087)	-.213* (.075)	-.035 (.077)	-.181* (.081)	.005 (.080)
사회보장-외부자	.084 (.070)	.045 (.085)	.041 (.094)	-.007 (.081)	.109 (.082)	-.082 (.086)	.095 (.086)
사회보장 외부자							
고소득 내부자	-.096 (.064)	-.148+ (.078)	-.075 (.086)	-.189* (.075)	-.204** (.076)	.029 (.072)	-.172* (.079)
내부자	-.041 (.061)	-.099 (.0744)	-.014 (.083)	-.206** (.071)	-.145* (.072)	-.099 (.076)	-.090 (.075)
내부자							
고소득 내부자	-.055 (.058)	-.049 (.069)	-.060 (.078)	.017 (.067)	-.059 (.068)	.028 (.072)	-.081 (.071)
N	888	885	888	888	888	885	883
R ²	.0277	0.0313	0.0330	.0567	0.0287	0.0291	.0471

+p<.10, *p<.05, **p<.01, ***p<.001

통제변수(연령, 성별, 혼인여부, 교육수준, 가구소득, 거주지역, 정치성향)를 포함한 결과임. 준거집단을 변경하여 표를 제시하였으며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함.

동자로 설정하여 다른 계층과 복지태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았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기준집단을 다르게 선정한 경우도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중복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불안정 노동자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경우 고소득 내부자의 복지태도 회귀계수는 고소득 내부자 준거집단

의 불안정 노동자 회귀계수와 절대값은 동일하고 부호만 변경된다. 이 경우 불안정 노동자 준거집단의 고소득 내부자 회귀계수만 제시하였다.

먼저 빈곤에 대한 원인이 사회에 있다고 보는 사회구조론적 접근에 동의하는 가를 살펴보았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해서는 불안정노동자를 준거집단으로 한 경우 고소득 내부자($b=-.175, p<.05$)가 정부책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정노동자에 비해서 고소득 내부자가 정부책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안정-외부자에 비해서 고소득 내부자가 정부책임에 대해 유의수준 10%수준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b=-.148, p<.10$).

복지항목별 지출 증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노동시장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에서 건강보험 및 보건의 지출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다. 불안정 노동자 기준으로 고소득 내부자($b=-.157, p<.05$), 내부자($b=-.173, p<.05$)의 건강보험 및 보건 관련 지출에 대한 지지가 낮게 나타났다. 불안정 자영자나 사회보장-외부자도 노동시장 내부자보다 건강보험 지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안정 자영자에 비해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 집단의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지지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각각 $b=-.197, p<.05$; $b=-.213, p<.05$). 사회보장 안정-외부자를 준거 집단으로 하는 경우에도 고소득 내부자와 내부자의 건강보험 지출태도가 부정적이다(각각 $b=-.189, p<.05$; $b=-.206, p<.05$).

불안정 노동자를 준거집단으로 한 분석에서 공적 연금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 유의수준 5%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고소득 내부자와는 유의수준 10% 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고소득 내부자가 불안정 노동자에 비해 연금지출에 대해 부정적이다($b=-.135, p<.10$). 또한, 사회보장 안정-외부자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경우 고소득 내부자와 내부자의 연금지출 지지가 낮게 나타났다(각각 $b=-.205, p<.05$; $b=.145, p<.05$).

빈곤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불안정 자영자

에 비해서 내부자가 부정적이며($b=-.181, p<.05$), 고소득 내부자가 유의수준 10%에서 부정적($b=-.152, p<.10$)이었다. 불안정 노동자와 불안정 자영자, 사회보장 안정-외부자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 하였다.

실업과 관련한 지출확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불안정 노동자를 기준으로 고소득 내부자($b=-.148, p<.05$)와 내부자($b=-.167, p<.05$)의 실업지출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다. 불안정노동자가 실업과 관련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놀라운 발견은 아니다. 사회보장 안정-외부자에 비해 고소득 내부자의 실업 지출에 대한 지지가 낮다($b=-.172, p<.05$). 불안정 자영자에 비해 불안정 노동자가 유의수준 10%수준에서 실업지출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172, p<.05$).

5. 결론

최근 들어 노동시장 이중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복지태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의 복지태도를 연구하는 시도들은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위험지위와 복지태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한국 복지태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동시장 내 세분화된 위험지위를 발견하였다.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 불안정 자영자, 불안정 노동자, 사회보장 안정-노동시장 외부자로 총 5개 계층을 도출하였으며 이 집단들은 복지태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불안정노동자는 임시일용직으로서 소득수준과 사회적 보호 수준이 낮고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다른 집단보다

위험지위가 높으며 위험요소가 다층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불안정 자영자는 자영자, 실업,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어 소득 수준이 가장 낮고 사회보장에서 제외된 특징이 있다. 반면, 고소득 내부자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노동시장과 복지태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세 집단을 도출해내었는데(고혜진, 2019; 홍경준, 김사현, 2018; Yoon & Chung, 2016) 본 연구에서는 5개 집단이 유의미한 집단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불안정 자영자 집단이 도출된 것이 흥미롭다. 이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중화를 분석(홍경준, 김사현, 2018)하거나 근로자와 자영업자/고용주를 구분하여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는 방식(고혜진, 2019)으로 접근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주, 실업,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내부자와 외부자간 복지태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는 자기이해와 이익(self-interest)에 기초한 복지태도에 대한 기존 이론과 부합한다. 특히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간의 복지태도에 차이가 존재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이 복지태도를 결정한다는 선행연구(김운태, 서재욱, 2014; 김운태, 서재욱, 2018; Häusermann & Schwander, 2012; Margalit, 2013; Moene & Wallerstein, 200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의 복지태도에 대한 설명력이 낮았고 비밀관성이 발견되었다(이상은, 김희찬, 2019).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위험이 복지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노동시장 위험이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에 비해 사회보장 안정 외부자, 불안정 노동자, 불안정 자영자에게 집중된다고 볼 때, 노동자 집단 중 취약계층이 비교적 일관적으로 복지

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인 위험을 경험하는 불안정 노동자는 고소득 내부자에 비해 불평등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불안정 자영자나 사회보장-외부자도 노동시장 내부자보다 건강보험 지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노동시장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에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위험지위나 위험지위의 복지태도에 대한 설명력을 발견한 최근의 연구(홍경준, 김사현, 2018; 최혜지, 2020)와 일치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형성은 소득계층보다는 노동지위에 기인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다만, 외부자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노동시장 위험지위에 따라 선호/지지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상이할 수 있다. 고용지위의 불안정성이 강한 외부자일수록 실업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지지하여 고소득 내부자와 내부자보다 노동시장의 위험지위가 높은 불안정 노동자가 실업지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발견되었다(가설 1). 흥미로운 것은 유의수준 10%수준에서 불안정 노동자에 비해 불안정 자영자의 실업지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가 노동시장의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나 수준의 위험을 경험하거나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실업의 위험을 근로자와는 다르게 체감할 수 있다. 또한, 복지수급이 복지태도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을 고려하면(김운태, 서재욱, 2017; 남재욱, 신혜리, 2017) 안정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임금근로자를 위주로 하는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자영업자의 복지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이지만 실제로 가입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

은 경우가 다수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관련 지출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다.

또한, 불안정 자영업자는 내부자, 고소득 내부자에 비해 빈곤 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관련된 위험이 큰 경우 빈곤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는 가설 2도 입증되었다. 불안정 자영업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빈곤층도 많이 분포하지만 중위소득 150%의 고소득도 분포한다. 현재 소득 수준으로 보면 소득 안정에 대한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영업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수입보다는 소득변동을 경험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욕구가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 다른 외부자 집단인 불안정 노동자, 사회보장 안정 외부자의 경우는 고소득 내부자나 내부자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내부자는 사회보험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3은 기각되었다. 불안정 노동자에 비해 고소득 내부자의 연금지출에 대한 선호가 낮았으며 사회보장 안정 외부자의 경우 고소득 내부자, 내부자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보험을 지지하였다. 사회보장 수급자로서의 지위가 강해질 수록 복지를 지지하게 될 수 있으며(김수완, 안상훈, 2013) 안정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내부자가 선호하는 사회정책일 수 있다(Häusermann & Schwander, 2012). 내부자가 사회보장의 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지를 지지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안정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임금근로자를 위주로 하는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서구사회처럼 성숙기를 거치지 않은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사회보장 수급 경험이 적어 사회보장에 대한 지지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소득

내부자 집단에 자영업, 고용주가 포함되어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온 임금노동자 중심의 노동시장 내부자와는 상이한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복지지출에 대한 태도는 명목적 사회복지 태도에 비해 강하게 표출되었다. 빈곤의 사회적 구조적 책임에 대해 집단간 차이는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빈곤에 대한 지출확대에 대해서는 불안정 자영업자가 고소득 내부자나 내부자보다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위험 다차원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복지태도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다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외부자-내부자의 위험지위는 횡단적인 측면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횡단적인 연구방법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개인의 고용 경험을 정태적으로 해석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내부자와 외부자를 추론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누락할 수 밖에 없다. 정태적 분석은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노동지위의 변화, 경험의 장기적인 효과를 간과할 수 있다(Fuller & Stecy-Hildebrandt, 2015).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는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의 궤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중화를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Fuller & Stecy-Hildebrandt, 2015; Mattijssen & Davlopoulos, 2019; Komp-Leukkunen, 2019).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노동자 집단이 그 자체로 노동자 집단의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는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의 위험을 측정하여 노동시장 위험에 따른 복지태도의 형성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 위험지위와 복지태도간의 연관성을 발견한 이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노동자 집단 중 불안정 노동자와 외부자 집단이 비교적 일관적으로 복지를 지지하는 것은 이들 집단이 사회적 보호

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수완, 안상훈, 2013). 한국의 이원주의적 복지체계(김원섭, 유진숙, 2018)는 노동시장 취약계층보다는 안정적인 계층에 복지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적 분배를 야기하고 있다. 노동조합 또한 정규직 위주 임금 인상투쟁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강화하였고 서구에 비해 복지발전에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이철승, 2018). 최근 코로나19이후 고용위기는 기존 한국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재 사회보험 체계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과 생계 위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서 소외되어있다(이병희, 2020). 더 나아가 한국 복지국가에서 노동시장의 차별적 위험과 불평등은 복지에 대한 지지를 분열시킬 수 있다. 이원주의적 복지제도 하에서는 국민이 복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것은 궁극적으로 복지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김원섭, 유진숙, 2018). 외부자와 불안정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원주의적 복

지제도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노동위험균열과 노동시장의 불이익은 정치적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복지국가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은 개인의 정치유능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Emmenegger, Marx, & Schraff, 2015). 정당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개인은 투표와 같은 적극적 정치적 행위를 포기할 수 있다(Emmenegger et al., 2015). 실제로 영미형 자유주의레짐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소득의 격차와 훈련기회가 내부자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정치권 행사에 소극적이다(Hausermann & Schwander, 2012).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은 복지국가내에서 자원을 동원하고자 하는 동력과 정치적 효능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만 이해되기보다 정치적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되어야한다. 노동시장 분절성을 약화시킬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혜진 (2019). 한국 노동시장의 다중 분절. <사회복지연구>, 50(1), 169-200.
- 권혁용 (2019).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내부자, 외부자 정치경제학. <한국정당학회보>, 18(1), 03-135.
- 김수완 · 안상훈 (2013). 한국 노동시장과 사회적 보호의 내부자-외부자 균열: 공적연금지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9(2), 83-103.
- 김연명 (2010).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의 재검토. <사회복지정책>, 37(4), 155-179.
- 김영순 · 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91, 211-240.
- 김용희 · 한창근 (2019).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의 잠재계층유형. <사회복지연구>, 50(1), 309-339
- 김원섭 · 유진숙 (2018). 한국 복지국가의 성과와 한계: 복지이원주의의 정치. <노동연구>, 37, 83-122
- 김윤태 · 서재욱 (2014). 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41(1)95-121.
- 김윤태 · 서재욱 (2017). 복지태도와 복지수급의 경험: 한국의 소득수준별 효과. <사회보장연구>, 33(4)31-56.

- 김윤태 · 서재욱 (2018).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불평등 완화의 국가책임 지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4(1), 137-169.
- 김윤태 · 유승호 · 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45, 183-212.
- 김형관 · 이상록 (2019). 복지태도 결정에 거시경제상황이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50(3), 261-97.
- 남재욱 · 신혜리 (2017). 기초연금 수급경험에 따른 수급자의 복지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2(2), 41-75.
-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57-90.
- 서재욱 · 김윤태 (2014). 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41(1)95-121.
- 서정희 · 박경하 (2015).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 불안정 노동지표 구성과 고용형태별 추이. <한국사회정책>, 22(4), 7-42.
- 손병돈 (2016).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 · 반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4), 5-34.
- 신광영 · 조돈문 · 이성균 (2005). 계급이동과 일자리 이동의 비교사회 연구: 자본주의 시장경제모델의 관점에서. <산업노동연구>, 11(1), 1-32.
- 안상훈 (2020). 한국인의 복지태도: 특성과 추세. <보건복지포럼>, 2020년 3월호, 31-43.
- 이병희 (2020). 보편적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월간 노동리뷰, 2020년 6월호. 노동연구원; 세종.
- 이상록 · 이순아 · 김형관 (2017).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 개인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 <사회복지연구>, 48(4), 59-89.
- 이상은 · 김희찬 (2019). 한국인 복지인식의 변화와 국제비교. <비판사회정책>, 62, 213-250.
- 이승윤 · 백승호 · 김미경 · 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11.
- 이승윤 · 백승호 · 김윤영 (2019). 한국 이중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이중화: 공적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 분석. <비판사회정책>, 63, 193-232.
- 이철승 (2017). 결합노동시장 지위와 임금불평등의 확대(2004-2015년). <경제와 사회>, 115, 103-144.
- 정승국 (2021). 노동시장의 내부자와 외부자와 다른 정책 선로를 갖는가?: 가구 효과 분석. <산업관계연구>, 31(1), 1-22.
- 정윤태 (2018). 복지체제와 복지태도의 국제비교 연구. <사회복지연구>, 49(2), 211-232.
- 최혜지 (2020). 돌봄의 위험지위와 복지선호에 기초한 사회적 균열의 탐색. <사회복지정책>, 47(1), 5-29.
- 허수연 · 김한성 (2016). 한국인의 복지태도. <사회보장연구>, 32(3), 203-225.
- 홍경준 · 김사현 (2018). 노동대중의 균열. <사회복지정책>, 45(2), 77-94.
- Collins, L. M., & Lanza, S. T. (2009).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John Wiley & Sons.
- Emmenegger, P., Marx, P., & Schraff, D. (2015). Labour market disadvantage, political orientations and voting. *Socio-Economic*, 13(2), 189-213.
- Fossati, F. (2018). Who wants demanding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Public attitudes towards

- policies that put pressure on the unemployed. *Journal of Social Policy*, 47(1), 77-97.
- Fuller, S., & Steyc-Hildebrandt, N. (2015). Career pathways for temporary workers: Exploring heterogeneous mobility dynamics with sequence analysis. *Social Science Research*, 50, 76-99.
- Häusermann, S., & Schwander, H. (2012). Varieties of dualization? 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insider-outsider divides across regimes, In Emmenegger, P., Häusermann, S., Palier, B., & Seeleib-Kaiser, M. (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7-51.
- Häusermann, S., Picot, G., & Geering, D. (2013). Rethinking party politics and the welfare state: Recent advances in the literatur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1), 221-240.
- Iversen, T., & Soskice, D. (2001). An Asset Theory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 875-893.
- Komp-Leukkunen, K. (2019). Capturing the diversity of working age life-courses: A European perspective on cohorts born before 1945. *PLoS ONE*, 14(2).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12400>
- Luxembourg Income Study (LIS) (2022). List of Variables.
<https://www.lisdatacenter.org/data-access/variables> (accessed on 2022. 5. 5)
- Margalit, Y. M. (2013). Explaining social policy preferences Evidence from the Great Recess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7(1), 80-103.
- Marx, P. (2014). Labour market risks and political preferences The case of temporary employ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3(1), 136-159.
- Mattijssen, L., & Pavlopoulos, D. (2019). A multichannel typology of temporary employment careers in the Netherlands: Identifying traps and stepping stones in terms of employment and income security. *Social Science Research*, 77, 11-114.
- Moene, K. O., & Wallerstein, M. (2001). Inequality, social insurance, and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59-874.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D. Kaplan (E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Newbury Park, CA: Sage, 345-368.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2). *Mplus user's guide* (7th ed.). Los Angeles: Muthén & Muthén.
- Palier, B., & Thelen, K. (2010). Institutionalizing dualism: Complementarities and change in France and Germany. *Politics and Society*, 38(1), 119-148.
- Rehm, P., Hacker, J. S., & Schlesinger, M. (2012). Insecure alliance: Risk, inequality,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6(2), 386-406.

Rueda, D. (2005). Insider-Outsider Politics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The Challenge to Social Democratic Par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1), 61-74.

Yoon, Y., & Chung, H. (2016). New Forms of Dualization? Labour Market Segmentation Patterns in the UK from the Late 90s Until the Post-crisis in the Late 2000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8(2), 609-631.

Labor Market Risks Differentiation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 and Welfare Attitudes in Korea

Ji Young Kang, Oejin Sh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llinois Stat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labor market risks are associated with welfare attitudes.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nd latent class analysis, five classes were derived: high-income insiders, insiders, precarious workers, precarious self-employed, and secured in social insurance outsiders. The members of the precarious work class experienced the highest level of risks based on their income, social insurance, occupation, and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are more likely to support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the unemployed and national pension expenditures than high-income insiders.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individual risks in the labor market are associated with welfare attitudes. It suggests that, in the Korean labor market, risks, rather than income leve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welfare attitudes.

Keywords: Welfare attitudes, Insiders, Outsiders, Precarious workers